

동아시아의 안보 상황과 남북한관계

흐람치힌 알렉산드르 아나톨리에비치 (러시아 정치군사분석연구소 부소장)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2012년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은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2010년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공격을 받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주변국의 국내 정치적인 정치 변동기를 맞이하여 역내 불안 세력인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러시아 군사전문가는 한국은 북한에 비하여 군사적·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지만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특성상 북한의 모험주의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실패한 국가로서 한국에 대해 대등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지만 한반도 주변 특성을 잘 파악해 한국의 군사시설을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잠수함 기술 등을 특화시켜 남한의 틈을 노린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국내적으로 강성대국 원년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대내외적 업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남한에 대한 추가도발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예상되는 북한의 추가도발은 핵실험, NLL 등 취약 지역에서 재래식 군사도발, 사이버 테러 등의 다양한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하면서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에 기초한 한반도의 평화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군사적 모험주의를 억제하고 정상국가의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정책목표인 점을 고려할 때, 북한에 대한 조건없는 지원보다는 북한이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의 상호관계를 확대·발전시키려는 의지가 보일 때 협력을 확대하는 Tit-for-Tat의 실질적 상호주의의 대북 정책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우선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하는 것이 한민족의 화해협력정책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주변국들도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한반도 안보의 현상황과 향후 전망

흐람치힌 알렉산드르 아나톨리예비치 (러시아 정치군사분석연구소 부소장)

목 차

1. 문제제기
 2. 한반도 안보 상황의 취약성
 3. 북한의 불량국가전략: 군사적 모험주의
 4. 주변국의 대한민국 인식
 5. 한국의 대응방향
- ※ 발제 관련 토론

1. 문제제기

- 현 단계에서 천안함 침몰사건은 축구 용어로 설명하면 ‘게임이 끝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임. 이는 한국이 그 사건에 대하여 말만 요란할 뿐 즉각적으로 그 어떤 반응도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는 뜻임.
 - 천안함 사건은 현재로서는 역사적 사실이 되어버렸음. 즉, 대한민국 군함이 북한 해군에 의해 격침되었다는 사실이 100% 정확히 입증되었음에도 한국은 천안함 사건을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짐.

- 현재의 역사적 단계에서 고도로 발달된 국가들이 무력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는 실질적인 인적·물적 손실을 보지 않고 단기간에 그칠 때에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 리비아 사태 당시 NATO 회원국들은 제한적인 항공작전을 수행했는데, 손실 위험은 없었지만 유럽 회원국들의 공군력이 크게 손상됨.
 - 시리아에 대한 공식적인 응징 사유가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작전은 수행되지 않았음. 실제로 시리아 사태에 개입한다면, 시리아는 막강한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개입 국가들도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 자명했음. 서방 국가들은 그러한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임.
 - 유럽 국가들은 고전적인 대규모 전쟁, 즉 ‘군대와 군대 간 전쟁’에 대한 준비 역량을 완전히 상실했음. 그러한 역량은 미국과 이스라엘, 대만, 대한민국과 같이 전통적으로 국민과 군대의 전투정신이 투철한 국가들에서도 현저히 저하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아마도 앞에서 언급된 국가들 내에서 주민 복지의 급증, 사회의 민주제도, 평화주의와 쾌락주의의 만연, 애국심의 실종, 인프라 시설의 피격 취약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 그 결과, 막강한 적국을 향하여 대규모 전쟁을 감행하는 것은 엄청난 국내정치적·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지출을 초래할 뿐임. 그러한 지출의 소요는 앞에서 언급된 국가들이 전쟁을 감행하더라도 아예 승리 가능성이 배제됨.

- 막대한 경제적·정치적·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얻어낸 승리는 비록 적국이 군사적으로 궤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반감됨. 즉, 좁은 의미의 군사적 승리는 넓은 의미의 승리와 항상 동일하지는 않음.

한국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하여 말만 요란할 뿐 즉각적으로 그 어떤 반응도 제대로 내놓지 않았기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짐

*대규모 전쟁 감행시,
막대한 경제적·
정치적·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얻어낸
승리는 비록 적국이
군사적으로 궤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반감됨. 즉, 좁은 의미의
군사적 승리는 넓은
의미의 승리와 항상
동일하지는 않음*

-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은 군사적 의미에서는 순수하게 3대 승전강대국에 포함되었으나 지정학적 의미에서 영국은 치명적인 패배만 겪었을 뿐임.
- 영국의 국제적 지위는 1939년보다 현저히 저하되었고, 현재까지도 그 당시와 같은 국제적 지위를 회복되지 못했음. 그 당시 영국은 오늘날에 비해 경제적·정치적·사회적 비용의 지출이 훨씬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국제적 지위에 큰 타격을 주었음.
- 무력충돌 발생 상황 시, 중진국 수준으로 막강한 공군력을 갖고 있는 비(非)민주 국가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러한 국가들은 내부 손실의 타격이 적기 때문에 집권세력은 훨씬 편리하게 군사력을 동원하거나 최소한 그 사용을 위협하는 것이 가능함.
- 앞에서 언급된 요인들은 한반도 정세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
 - 순수한 군사계획에서 살펴보면, 대한민국과 북한은 전략적으로 비기는 상황에 처해있음. 둘 중 어느 한쪽도 상대방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그 영토를 장악할 가능성은 없음.
 - 북한군은 한국군과 비교해 볼 때 기술적으로 뒤떨어져 있지만, 무기·장비의 수, 군인의 수와 사기, 광신적 정신 자세로 그 부족을 메울 수 있음.

2. 한반도 안보 상황의 취약성

-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대한민국은 앞에서 언급된 경제적·정치적·사회적 비용 지출이 북한보다 훨씬 엄청날 것임.
 - 이는 주민의 생활수준과 경제·인프라 발전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앞섰다는 사실로 설명되어짐. 따라서 대한민국으로서는 전쟁이 발발하면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손실이 패전에 버금가거나 심지어 영토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정도의 규모라고 할 수 있음.
 - 한국군에는 자국 내에서 매우 심각한 손실을 중단시킬만한 역량이 없음. 예를 들면, 북한군은 대포 보유량에 있어 중국군에 뒤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화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함.

- 미국이 한국을 편들어 전쟁에 개입하더라도 상황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음.
 - 최근 15년간 미국의 군사력은 심각하게 쇠퇴되고 있음. 현재 미국의 군사력이 무한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임. 그러한 사실은 최근 미국의 군사 독트린 문서에서도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음. 특히, 미 해군은 현재 규모면에서 인천상륙작전(1950년 9월)에 버금가는 상륙작전을 수행할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음.

- 한국에서 지상전이 발생할 경우 미군은 최대 4개 지상군 사단 및 해병대를 동원할 수 있지만 그 병력을 현장에 이동 배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
 - 미군은 북한과 같은 적군과 싸우기 위해 한반도에 경무장 여단 및 스트라이커 여단을 이동 배치할 수 있지만 그 부대들은 매우 낮은 타격력을 갖추고 있고 낮은 전투적 사기를 보여줄 것임.
 - 미 공군은 전투행위 경로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요인도 북한이 꽤 강력한 방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다 땅굴과 터널을 널리 활용하고 있기에 미 공군의 효율적인 활동도 절대적이지는 않을 것임.

- 미국이 개입할 경우 북한 영토를 장악하고 북한의 군사적 붕괴를 초래할 수는 있겠으나, 대한민국도 엄청난 파괴와 인적 손실을 면하지는 못할 것임.
 - 더욱이 대한민국은 이후 북한의 파괴된 경제와 인프라를 복구해주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사회보장도 떠맡는 등 엄청난 부담을 짊어져야 함.
 - 그 때문에 군사계획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대한민국으로서 승리를 언급하는 것이 전혀 무의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한국으로서 더욱 절망적인 점은 실제로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경우임.
 - 가까운 장래에 북한은 ICBM을 위한 핵탄두를 생산할 것임(파키스탄 또는 중국으로부터 완제품 형태로 입수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해서는 안 됨). 보다 간편하게는 핵항공폭탄을 생산할 것인데 이는 더욱 현실적임.
 - 핵지뢰를 사용하면 북한 국경 지방의 산지에서는 미군과 한국군에게 파괴적인 손실을 끼칠 것임. 이 경우 대한민국으로서 군사적으로 실패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임.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대한민국은
경제적·정치적·
사회적 비용 지출이
북한보다 훨씬 엄청날
것임. 대한민국으로서
전쟁으로 야기된 손실이
패전에 버금가거나
심지어 영토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정도의
규모라고 할 수 있음**

**넓은 의미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군사행동
결과가 어떻게 북한에
대하여 승리를
거둔다고 할 수 없음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음. 북한 국내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
될 경우에는 전쟁이란
전적으로 실용주의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음**

3. 북한의 불량국가전략: 군사적 모험주의

- 넓은 의미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군사행동 결과가 어떻게 북한에 대하여 승리를 거둔다고 할 수 없음(역자 : 한국이 이겼다 하더라도 세계적 수준으로 경제가 발달한 만큼 전쟁으로 인한 손실이 막대해 결과적으로는 북한에 승리한 것이 아닐 수 있다 라는 의미). 그러나 (잃을 것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음. 군사적으로 협박하는 행위는 북한의 주된 ‘수출품목들’임.
 - 북한 국내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에는 전쟁이란 전적으로 실용주의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음. 전쟁을 하게 되면 사회 내부의 결속도 이를 수 있고 자신의 사회·경제적 처지에 대한 불만을 외부의 적에게 돌릴 수도 있음.
 - 엄청난 인적 손실조차 북한 지도부에게는 유리할지도 모름.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 기아에 굶주리고 불만에 찬 인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임. 그 점에 있어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현상유지가 전쟁으로 귀결될 수도 있음.
- 미국이 전쟁에 개입할 경우 북한은 공공연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타당하게) 자국의 승리라고 해석할지도 모름.
 - 이를 통해 북한 지도자들은 북한 내부에서는 상당 기간에 걸쳐 새롭게 공식적이고 윤리적으로 적법하다고 인정받을 것임. 그러면 어떠한 내부 문제가 발생하든지 이는 모두 전쟁 때문이라고 자연스럽게 설명되어질 것임.
-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도 국가가 소멸되고 자신의 자유와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패배의 위험도 상존하지만 북한 내부 정세가 위태롭다면 북한으로서는 그러한 위험도 정당화되거나 허용될 수 있을 것임. 내전이 외부 적과의 전쟁보다도 훨씬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임.
- 한국이 수동적으로 북한 정권의 붕괴를 기다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있음.
 - 북한 정권은 내부적으로 매우 견고한데다 전쟁을 협박 수단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천안함 사건에서 확인되었듯이 북한은 한정된 범위에서는 제약 없이 군사수단을 동원할 수 있음.

- 북한의 내부 상황이 더욱 긴장될 경우, 북한 지도부는 북한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상유지도 북한으로서는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임)
- 북한 지도부에게 핵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인데, 이는 북한에게는 생존보장 수단이면서 동시에 (협박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 되기 때문임. 그렇기에 김정은 정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 포기론을 내세우지 않을 것임. 핵 포기는 북한의 본질적인 이익에 위배되는 것임.

4. 주변국의 대한민국 인식

- 외부의 주요한 이해관계국 중 하나인 일본은 남북한을 잠재적으로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음. 특히, 대한민국을 매우 강력한 경제적 경쟁 상대로 여기고 있음. 따라서 일본은 어느 한쪽을 편들지 않는 상태에서 남북한 간 전쟁에 관심을 갖고 있는바, 이는 쌍방이 최대한도로 군사적·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임.
 - 일본으로서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결코 용납할 수 없음. 게다가 일본은 한반도 정세에 대하여 실제적인 영향력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에 한반도 통일에 대해 일본의 입장은 노골적일 만큼 부정적임.
- 러시아는 한국의 평화적이고 대등한 통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가장 관심이 지대한데, 이는 통일한국이 중국은 물론 일본에 대해서도 강력한 균형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임. 이 점에서 통일한국은 자연스럽게 러시아의 동맹국이 될 것임.
 -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전략도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그 목적 자체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음.
 - 현 단계에서 한국 정세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유일한 과제는 전쟁을 방지하는 것임. 전쟁 발발 시 연해주에 영향을 끼치고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 미군이 출현할 수 있기에 러시아의 행동은 한반도 현상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미국은 지나칠 정도로 한국의 현상유지에 대해 관심이 많음.
 -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평화적 방법을 통해 통일한국이 출현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있음. 왜냐하면 통일한국이 매우 강력하여 실제로 미국과의 모든 관계에서 자율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임.

러시아는 한국의 평화적이고 대등한 통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가장 관심이 지대한데, 이는 통일한국이 중국은 물론 일본에 대해서도 강력한 균형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임. 이 점에서 통일한국은 자연스럽게 러시아의 동맹국이 될 것임

중국도 한반도**현상유지를 선호하고****있는데, 일본과****마찬가지로 한반도****평화통일을 전적으로****용납하기는 어려울****것임**

- 미국은 현 상황에 만족하고 있음. 즉, 두 개의 한국이 상호간에 지나치게 서로에게 ‘몰두해있어’ 자신들의 지정학적 역량을 무력화시키고 있음.
- 중국도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있는데,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전적으로 용납하기는 어려울 것임. 그러면서도 한반도 내의 무력분쟁도 원하지 않음.
- 중국은 북한체제를 극도로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을 군사적 붕괴로부터 구출해내는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음.
- 하지만 중국은 북한과는 군사적 의무로 맺어져 있는데다 자국 국경에 미군의 등장을 원하지 않음. 전쟁이 발발하거나 북한에서 내부 혼란이 발생한다면 미국의 묵시적 동의하에 군사력으로 북한 점령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임.
- 더욱이 중국군은 1950년대와는 달리 전쟁이 종식되어도 사실상 합병을 추진하면서 북한에서 철군하지 않을 것임. (이를 위해 중국에서는 자국 영토에 한국 고대국가들이 편입되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검토하였음)
- 이 경우 한반도통일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질 것임.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자국의 국경에서 현재보다도 훨씬 심각한 위협과 조우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북한 핵무기는 대한민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도 겨냥할 것이라는 사실을 가정해 볼 수 있음.

5. 한국의 대응방향

- 어느 시점에서는 한국으로서는 대북 경제지원과 함께 ‘햇볕정책’과 유사한 정책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며 이는 전쟁으로 인해 입는 피해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할 것임. 또한 이는 반드시 북한의 대내외 자유화에 일조할 수도 있을 것임. 특히 대북 지원정책에 따라 김정은 자신이 자유화 방향으로 행보를 취한다면 이러한 정책 고려는 매우 가치가 있음. 이에 한국이 적절히 호응한다면 북한체제의 ‘해빙’을 지속 촉진시킬 것임
- 북한 지도부의 목표가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제(일국양제)’ 원칙에 따른 한반도 통일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북한 정권이 한국의 경제적 지원 하에 생존을 유지하는 것을 가정해 볼 수 있고 그 대가로 북한은 자국의 정치제도와 군

의 존엄성만 보존한 채 일부 외교 및 대외경제정책을 한국과 협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에서는 적극적인 대북 지원 방안이 용납되지 않는 것임.
 - 한국에서는 이미 새로운 세대가 성장했는데, 이들은 북한이 분단된 고향이라기보다는 가장 위험한 외부의 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 이들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먹여 살리는 정책이 중대한 실책이자 북한의 강력한 공갈전술에 대한 양보로 보임. 특히,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매우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이상하게 보일 것임.
-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방안이 경제적으로 한국에게 유리할 수 있으며 더욱이 이러한 조건적인 통일이 진행된다면 북한체제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와해될 것임.
 - 한국의 막강한 경제력이 북한 주민들의 복지를 크게 향상시켜줄 경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혜택을 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짐.
-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통일한국의 권력구조에 북한 지도자들이 흡수되면 이들이 ‘반기’를 든다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임.
 - 러시아의 사례를 살펴보면, 러시아는 자국의 집권 엘리트에 종전의 체첸반군 지도자 중 일부를 흡수하는데 성공하였음. 그 결과 체첸인들은 심리적 차원과 개인적인 경제적 이해관계 차원에서 러시아로부터 이탈할 수 없었음.
- 결론적으로 주목할 만한 점은 한반도 현상유지가 모든 당사자들을 만족시키겠지만 이는 영구히 계속될 수는 없을 것임. 북한체제를 평화적으로 자유화시키거나 순식간에 붕괴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두 번째의 경우 한국은 자신의 재원으로 북한을 복구해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중국에 점령당하는 것을 감수해야 함. 이는 현 상황보다도 훨씬 나쁠 것임. 대한민국에서는 전쟁은 어떠한 타개책보다 파국적일 것임.
- 정치·경제·군사적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유망한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가장 유리함. 목표를 달성하려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통일한국은 강대국이 될 것임. 종합적인 국력에서 통일한국은 영국·프랑스·독일·일본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5대

**한국으로서는
대북 경제지원과 함께
‘햇볕정책’과 유사한
정책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며 이는
전쟁으로 인해 입는
피해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할 것임.**

한국은 당면적 이해
타산에 몰두하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국면을
중시하는 것이 오히려
한반도 정세의
경색화를 막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함

강국(미국·중국·러시아·인도와 더불어)에 진입할 것임.

- 한국은 당면적 이해타산에 몰두하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국면을 중시하는 것이 오히려 한반도 정세의 경색화를 막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함

발제 관련 토론

- 고상두(연세대학교 교수, 한국슬라브학회 회장, 이하 고): 이제 자유롭게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국방대학교 김경순 박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 김경순(국방대학교 교수, 이하 김): 흐람치힌 박사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돌발행동 가능성이 있고, 그럴 때 한국은 군사적 충동을 피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대북 지원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패배주의적 정책 대안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동안에 햇볕정책을 추진했지만 그 결과가 성공적인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햇볕정책 기간 동안에 북한의 강성정책이나 도발성이 약화되거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햇볕정책보다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약이 공존하고, 우리가 정책 주도권을 쥐어야 합니다. 북한의 변화가 가능해야 하는데 햇볕정책보다는 유연한 정책에 대한 흐람치힌 박사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한반도가 평화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한국이 핵보유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 주변 국가들의 도움을 얻기 어렵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망가뜨리는 결과가 됩니다. 러시아는 핵을 보유한 한국을 원하는지 궁금합니다.

- 박상현(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이하 박): 저는 흐람치힌 박사님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유럽 국가들이 리비아와 시리아에 대해서 전쟁을 하는 형태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형태가 다릅니다. 유럽은 전장이 해외이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은 생존에 위협이 되는 전쟁입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때 우리가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적 규범에 따라서 모든 국가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맞춰서 대응을 해왔기 때문임

니다. 천안함 사건의 경우 진실을 밝히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잊혀진 사건이 아니라 또 다른 도발에 대한 대응에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선제적 억지(proactive deterrence)라는 새로운 개념을 발전시켜서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원점과 배후 세력까지 확고히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들의 의지에 반하는 선제공격을 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이후에 추가적인 도발을 한다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총체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둘째, 통일한국의 미래상입니다. 지금보다는 국력이 증가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을 추월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통일한국이 군사적으로 주변국가에 위협이 되거나 공격적인 행태를 취할 가능성은 낮고, 국력이 증가해도 평화 애호국의 태도는 지속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계속 승계할 그런 의지가 전혀 없고 국민들의 의지에 따라서 핵을 포기하겠다는 국가의 정책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흐람치힌 박사님의 한반도 문제에 러시아의 중요성이 크다는 의견에 동감하는데 그럼 러시아는 이런 북한의 행적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향후 한국과 어떤 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북한의 도발성을 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흐람치힌 알렉산드르 아나톨리에비치(이하 흐):** 유연한 대북 정책은 한국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어떤 형태가 되든 기본적인 원칙은 공갈협박을 일삼는 집단을 일방적으로 먹여 살리는 일은 안 됩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시리아 사태의 예를 들었던 이유는 전쟁이라는 수단을 더 이상 선진 국가들이 취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한국 국민들도 전쟁을 피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막강하지만 궁극적인 전략으로 한국 정부는 전쟁이 아니라 통일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핵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핵을 보유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제가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사람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핵무기 보유가 평화주의를 표방하는 한민족의 기본적인 원칙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존중합니다.

북한의 돌발행동 가능성이 있고, 그럴 때 한국은 군사적 충돌을 피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대북 지원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패배주의적 정책 대안임.

**통일한국의 핵무기
보유가 평화주의를
표방하는 한민족의
기본적인 원칙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지만
한국 정부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존중함**

통일한국은 일본에 필적하는 경제력을 보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통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외부의 힘보다는 한국인의 힘으로 이루어야 하며 외부의 조력은 2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외부의 지원에 힘입어 통일을 하려고 한다면, 아마 한반도 통일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가 힘들 것 입니다.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주변국들 중에서 한국의 통일을 원하는 국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통일한국이 핵 프로그램을 갖는 것을 물론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통일 한반도는 책임감이 있는 나라가 될 것이므로 핵을 보유해도 그에 대해 우려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핵을 포함한 전반적인 역할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러시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을 중국의 지배권 아래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한국과 협력 할 수 있는 분야는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한 다음에, 공동으로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우선적으로 물류 운송 분야가 가능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얘기는 또 다른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반도와 관련해 아쉬운 점은 러시아 정부 자체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거나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남한과 북한의 중개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별다른 고려가 없다는 점입니다.

- 고: 서동주 박사님과 우준모 교수님의 토론 이어서 들겠습니다.
- 서동주(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이하 서): 군사·안보분야의 전문가인 호람치헌 부소장님의 한반도 정치·군사상황에 대한 의견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이 모두 현 단계에서 한반도 현상유지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한반도에서 전쟁 방지가 가장 중요하고, 북한의 국가체제가 고립된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정상적인 국가로 조용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중재자, 또는 중개자 역할을 갖고 있는데 한국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한반도에 대한 심각성이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한러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를 심화시키며 러시아의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 우리 같은 외교·군사·안보전문가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흐람치힌 박사님은 북한 군사력을 평가 하는데 있어서 핵항공폭탄의 생산, 핵지뢰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핵이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군사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군사전문가 입장에서 평가하고 있는지, 파키스탄과 중국을 통한 ICBM의 폭탄입수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흐람치힌 박사님은 중국이 북한을 군사적 붕괴로부터 구출해내는데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북한체제를 극도로 부정적으로 보고있다고 평가하십니다. 이는 중국이 북한체제를 옹호하고, 가장 강력히 후원하고 있는 세력으로 인지하고 있는 통상적인 이해와 다릅니다. 실제로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북한 유사 시 북한 지역 일부를 군사적으로 점령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북한체제의 엘리트들을 통일 지지세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러시아 정부가 체첸반군의 지도층을 흡수한 사실을 예로 들었는데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러시아 내에서 한반도 군사와 안보를 공부하는 학자들의 위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준모(선문대학교 교수):** 한반도의 핵 문제에 관해서 한국인들의 고민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본의 고농축 플루토늄 보유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걸 감안할 때, 한반도에 핵 보유국가가 등장하면,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러시아는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겠습니까? 북한의 급변사태 시 일본이나, 러시아, 미국은 물론 중국의 북한 점령을 동의할 것 같지 않습니다. 러시아도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이 북한을 점령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러시아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또한 북한이 버블제트를 일으켜서 천안함을 파괴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함과 관련해서 북한의 도발기술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흐:** 북한에 전자전속부대가 있고 사이버 테러 부대도 있다고 했는데 이는 북한의 첨단기술력이 그 정도 수준을 갖추었다라고 추측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들은 예전 소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주변국들 중에서 한국의 통일을 원하는 국가가 없음. 그렇기에 한국이 외부의 지원에 힘입어 통일을 하려고 한다면, 아마 한반도 통일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가 힘들 것임

**중국은 전략적 차원에서
한반도 유사 시 북한을
합병하는 그런 정책을
고려하고 있을 것임**

련시대의 무기 및 기계 제조를 전수받아서 답습한 것인데 그 당시 소련기술의 수준이 높았습니다. 천안함을 공격할 수준은 된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프로그램 수준을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반도가 산지라는 특성상 북한이 북한측 DMZ 지대에 핵지뢰를 설치한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북한의 ICBM 구입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로켓기술이 중동이나 파키스탄보다는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주장이지만, 파키스탄과 북한 사이에 모종의 계약이 체결되어서,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보내면 북한이 로켓을 보내는 밀약이 있다는 말도 있다고 할 정도로 북한의 로켓기술이 높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지도부 내에서도 현재 덩샤오핑의 정책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덩샤오핑의 정책을 버리고 국제사회에 새로운 지정학적 변화를 일으킬만한 어떤 문제를 제기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중국 내에 덩샤오핑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앞으로는 중국이 점점 더 국제사회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아마도 몇 가지 원칙적인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첫째, 중국은 전략적 차원에서 한반도 유사 시 북한을 합병하는 그런 정책을 고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체제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최근 들어 중국 학계에서 출판되고 발표되는 논문들의 추세를 보면 미국에서 발표된 북한에 대한 논문, 또는 한국에서 발표된 북한에 대한 논문과 흡사할 정도로 부정적인 시각의 논문이 많습니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논문이 중국학계에서 출판된다는 점 자체가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북한은 이러한 중국의 변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은 스스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좀 더 좁히려는 그런 시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유사 시에, 일방적으로 북한 편을 들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군사적 충돌을 하게 된다면, 외부의 개입이 없는 상황이라면 중국도 아마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미국이

한반도 상황에 개입한다면 중국도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자면, 일본은 현재도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통일한반도 시대에도 일본은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다면,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굉장히 부정적일 것이고, 러시아의 극동 지역, 특히 도서 지역에 군비, 군사력을 증강할 것입니다.

1996년도에 러시아 정치군사분석연구소가 설립되었는데, 러시아에 대한 외부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연구하기에 제1차적으로는 누가 적대국인가, 잠재적인 적대국은 누가 될 것인가라는 것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 분석 결과 결론은 중국이 핵심적인 대상이라는 결론이 났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연구방향은 동아시아 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연구의 일부분이 천안함에 대해서였었는데, 북한의 군사 기술력은 어뢰를 만들 수 있을 정도는 분명히 된다는 것이고, 황해를 포함해 한반도 주변 영해의 특성, 바다의 지형에 맞춘 잠수함들이 개발되었고, 그런 잠수함을 특화시켜서 만들 정도의 기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잠수함을 발견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다의 특성을 잘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반적인 기술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주변의 특성에 맞춰진 그런 특화된, 맞춤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 고: 오늘 토론했던 것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햇볕정책과 핵무기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햇볕정책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합의, 의견 일치가 있었습니다. 햇볕정책을 재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와는 다른 햇볕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흐람치힌 부소장님은 강대국의 시각에서, 핵의 억지력에 중점을 두는 것 같고, 한국학자들은 중진국의 시각에서 핵 없는 세상을 우리의 전략으로 생각하는 차이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중국은 북한체제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음. 그렇기에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좀 더 좁히려는 그런 시도들을 보이고 있음

2012 한반도 안보환경과 한국의 대응방안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목 차

1. 문제제기
 2. 북한의 국내정치 현실과 대남 정책의 방향
 3. 예상되는 북한의 대남 안보위협
 4. 결론
- ※ 발제 관련 토론

1. 문제제기

- 최근에 전개되는 한·중·일 영토분쟁으로 동아시아 안보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현실적인 위협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임.
 - 북한의 박길연 외무성 부상은 2012년 10월 1일 제67차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적대적 북한정책으로 인해 한반도가 작은 불씨로도 핵전쟁(thermonuclear war)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됐다”고 주장하며 남북관계의 경색에 대해서 “현 남한 정부는 집권 이후 6·15 남북공동성명과 10·4 선언을 포함한 모든 남북합의를 무효화하면서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다”고 남한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김.
-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정치권력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음.
 -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북한은 지난 9월에만 7차례에 걸쳐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불법 월선 행위를 감행했음.
 - 우리 해군의 정당한 퇴거조치에 대해 북한은 ‘괴뢰의 총포탄 난동’, ‘살인광기’, ‘남은 것은 강력한 타격행동 뿐’이라고 주장하며 군사도발을 정당화하고 있음.
- 2012년은 북한의 정권이양과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맞물리면서 북한은 내부 정권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한편 남한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대남 군사도발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은 남한 여론에 ‘대북 위기의식’이 확산됨으로 보수진영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음.
 - 현실적으로는 반대의 경우도 가능함. 북한은 남북관계의 경색을 조장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남한 보수 정권의 ‘대북 적대정책’의 탓으로 돌리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북한에 강경한 보수 정권보다는 화해와 협력을 선호하는 진보 정권의 출현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는데 유리하다는 신호를 의도적으로 남한의 여론에 보낼 수 있음.
- 본고에서는 북한의 대남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기초해서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의 가능성을 논의하고 향후 남북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최근에 전개되는
한·중·일 영토분쟁으로
동아시아 안보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현실적인 위협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임*

**북한은 김정은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강성대국의 원년이라는
2012년 북한 주민들에게
내세를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권력
안정화의 핵심이지만,
식량난, 에너지난,
경제난으로 만족할
만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2. 북한의 국내정치 현실과 대남 정책의 방향

- 북한 정치권력의 불확실성은 최고 권력의 안정화와 관련이 있음.
 -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로 이어지는 권력세습과정에서 최고지도자를 정점으로 권력이 독점되는 국가제도를 수십 년 간 운영해 옴. 이런 점에서 김정은이 독자적으로 안정된 지배체제를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집단지도체제를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북한정치체제의 전통적 권력구조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문제임.
 - 지금 북한체제가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김정은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구도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는 주요한 관심 사안임.
- 김정은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강성대국의 원년이라는 2012년 북한 주민들에게 내세를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권력안정화의 핵심임. 실질적으로 경제성과의 혜택을 체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식량난, 에너지난, 경제난으로 만족할 만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 2011년 10월 이후 식량 배급량을 지속적으로 늘려 2012년 1월에는 1인당 395g을 지급하였지만 이는 성인 1일 기준 최소권장량인 458g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평양에서 쌀 가격은 김정일 사망 이전보다 몇 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보아 경제난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의미함.
 - 강성대국 원년의 상징적 사업인 평양 10만호 주택건설은 전력난, 용수난, 자금난, 원자재난으로 목표달성이 어려움.
 - 에너지를 타개하기 위한 희천발전소도 완공이 지연되고 있어 강성대국 원년의 위상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북한은 2011년 홍수피해의 복구지연 영향과 2012년 봄 가뭄과 여름 태풍으로 하반기에 식량난은 더욱 가중될 것임.
 -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소(IIE)에 따르면 북한은 2012년 24만 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음.
 - 세계식량정책연구소(IFPRI)가 발표한 ‘2012 세계 기아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기아지수는 작년과 같은 19점으로 2001년(20.1점)에 비해 소폭 하락했지만 1990년(15.7점)에 비해서 올해 북한의 기아상태가 1990년보다 더 심각한 수준임.
- 북한에 있어 최후의 조력자로 알려진 중국은 북한에서 경제난으로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김정은 지도체제가 안착되는

것을 도우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해 옴. 하지만 기존 북중관계의 기초에도 불구하고 북한 권력의 실세인 장성택이 지난 8월 중국을 방문하여 경제특구에서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북한이 추진 중인 경제개혁에 필요한 차관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함.

- 경험적으로 북한은 남한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다양한 도발을 감행했음.
 - 남한이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기 시작한 1987년 대선에서는 대한항공 858 폭파테러를 감행했고, 1992년에는 1차 핵위기를 조장함.
 - 2002년에는 제2 연평해전과 동시에 부산아시안 게임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내는 양면전술을 구사했고, 2007년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는 1차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극대화시킴.
 -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특정 성향의 후보에게 생긴 득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도발이 있어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북한은 국내적으로 경제난, 식량난, 에너지난에 처해 있고 강성대국 원년으로 진입할 역사적 과업의 달성도 어려운 상황임.
 -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은 중단되었고 전통적 우방인 중국의 지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으로 새로 출범한 김정은체제 안착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체제 안정화를 위해 추가도발에 의존할 가능성이 산재해있음.

새로 출범한 김정은체제 안착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체제 안정화를 위해 추가도발에 의존할 가능성이 산재해있음

3. 예상되는 북한의 대남 안보위협

- 북한 자체가 글로벌 안보위협임. 김정일 사후 김정은으로 권력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음.
 - 미국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 그룹의 연구보고서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가족기업의 형태로 남아있다고 진단하면서, 1세대가 창업하고 2세대는 유지하고 3세대에 가서는 무너진다는 공식에 대입하여 북한의 안정성이 문제라고 평가함.
 - 북한의 정치 당국이 내부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면 쿠데타, 주민봉기,

**북한은 중동의 민주화
과정에서 독재자의
비참한 말로를 핵무기
포기 때문이라는
오만에 근거하여
북한의 정치적 구조가
취약할수록 핵무기에
더욱 집착할 것임**

주민대량탈출 등 다양한 형태의 북한 정권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임.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한반도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개입하는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음.

-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한국과 주변국의 열망에 반해, 북한은 2012년 이 가기 전에 3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음.
 - 2012년은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 정권교체 시기로서 동북아의 정세가 불안정한 취약성을 이용하여 북한은 핵보유 의지를 현실화시키려 시도할 것임.
 -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4월 13일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지에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함. 태풍 볼라벤과 산바로 인한 함경북도 길주의 핵실험장과 무수단리의 미사일 발사지의 피해를 통해 알려진 북한의 3차 핵실험 준비 계획은 핵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줌.
 - 북한은 중동의 민주화 과정에서 독재자의 비참한 말로를 핵무기 포기 때문이라는 오만에 근거하여 북한의 정치적 구조가 취약할수록 핵무기에 더욱 집착할 것임. 북한은 정권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한의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재래식 군사도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직접적인 군사적 무력도발은 보수 진영은 물론이고 진보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도 안보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군사도발의 가능성이 있음.
 - 북한 내부의 정치적 불안의 가중으로 군사적 도발에 의지할 가능성은 여전함.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의 원년으로 설정한 계획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국지적 무력도발을 선택할 수 있음.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력도발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북한은 평화공세를 통해서 남남갈등을 야기하는 여론의 이간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음.
 - 남한의 정치적 특성을 잘 이해하는 북한은 취업난이나 반값등록금 같은 남한의 계층갈등과 관련된 국내문제보다는 남북관계에서 민감한

문제로 평가되는 대북 경제지원, 금강산 관광, 남북이산가족 상봉 등의 평화협력에 대한 의제를 주도함으로써 남한 내부의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대결구도를 격화시키려고 할 것임.

- 한국 정치에서 북한문제는 이념적 잣대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남남갈등을 부추김으로써 북한과의 평화협력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의 표를 결집시키는 전술을 선택할 수 있음.

○ 북한의 대남 테러행위의 위험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음.

-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해서 또 다시 무력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따름. 하지만 북한의 급변사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북한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테러행위에 의존할 수 있음.
- 북한은 국방위원회 산하 총참모부에 테러전력이 15만 명, 전자전국(Department of cyberwar) 직속 2개 대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 테러를 비롯해 민주주의적인 남한사회(Democratic and open society)를 상대로 다양한 형태의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4. 결론

- 남한 내에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대남 정책에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으나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관련하여 북한의 다양한 형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 북한은 지난 화해협력정책 10년 기간 동안 남한의 지원과 협력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실험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불모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불량국가의 행태를 보여왔음.
 - 현 정부에 들어서 박왕자 피격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 중단과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에 대한 민간의 경제협력을 제한하는 5·24 조치를 취하게 됨.
 - 북한은 스스로의 도발행위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남북관계의 경색에 대한 책임을 남한의 대결정책에 떠넘기고 있음.
 - 남한에서 보내준 인도적 지원과 협력에 대해서 북한은 미사일 실험 발사, 3차 핵실험 준비, 연평도 포격으로 대응하면서 남한을 비난하고 있음.
 - 협력을 바란다면 협력의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동을 중단하고 상대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해서 또 다시 무력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따름. 하지만 북한의 급변사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북한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테러행위에 의존할 수 있음

**북한체제가
살아남는 길은
개혁과 개방을 통해
주변국가와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 국제질서에
편입되는 것임**

방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상식임.

- 남북관계의 경색에 따른 최대의 피해자는 남북한 당사자임. 협력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남북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신뢰회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함.
 - 북한이 체제 생존에 필요한 경제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남한이 요구하는 비핵화로 부응해야 함.
 -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에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상호주의 전략을 선택해야 함.
 - 남북한이 경제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만큼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는 정상국가의 길을 가야 함.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확산을 통해서 주변국의 경제지원을 강압하는 불량국가의 외교행태를 통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행위자로 동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국내 정치적으로도 주민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희생한 대가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주민들에게 인류보편적 가치를 희생시켜 정권을 연명하는 국가권력은 21세기에 더 이상 생존이 어려움. 정보와 통신 기술의 발달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이 외부세계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한계에 도달하였음.
- 남한에 대한 무력도발, 남한에 대한 원색적 비난, 그리고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가 북한체제의 생존위기에 대한 처방은 아님. 북한체제의 현실은 경제난, 에너지난, 그리고 식량난을 아우르는 국가실패로 진단됨.
 - 북한체제가 살아남는 길은 개혁과 개방을 통해 주변국가와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 국제질서에 편입되는 것임.
 -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의 길을 가려 한다면 남한은 북한의 가장 충실한 조력자가 될 것임.
 -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어떤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북한이 원하는 무조건적 지원이 가능한 시대는 이미 지나감. 남한의 여론은 화해협력정책의 공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음.
 - 대선 이후 남한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시도하겠지만 남한의 협력에 북한이 신뢰로 부응해야하는 단계적 화해협력정책(Tit-for-Tat)이 대북 정책의 근간을 이룰 것임.

발제 관련 토론

- 고: 이성우 박사님 발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 김: 이성우 박사님은 선거전에, 신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주로 북한이 무력 도발해왔다고 했지만 오히려 신 정부 출범 초기에 북한의 무력 도발이 더 높지 않은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박: 이성우 박사님께 5·24 조치와 관련하여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출구전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 이성우(이하 이): 김경순 박사님 지적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북한의 내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도발할 가능성이 높고, 그 시점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정권 전환 초기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 화해협력정책에서 상호주의정책으로 정권의 교체기에는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대선 이후 새 정부에서는 현재 대북 정책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생각할 수 있는 도발은 사이버 분야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상현 박사님 질문과 관련해서 북한과 관계개선을 위한 5·24 조치 출구전략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서 정권교체를 통해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데, 문제는 상호주의 원칙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한국의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햇볕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상호주의와 교류협력의 절충점을 모색하는 합리적 상호주의가 될 것입니다. 신뢰의 정치라는 trust politic은 전통적으로 북한을 국가행위자로 보고 정상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엑셀로드의 Tit-for-Tat 전략입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선의를 보이면, 그 선의에 대한 상대방의 화답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내가 다음번에 똑같은 동일한 양은 아니지만, 동일 종류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인데 이것이 정권교체 후에 생각할 수 있는 5·24 조치의 출구전략입니다. 문제는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에 대한 남한 측의 태도입니다.

- 고: 서동주 박사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권교체 이후, 5·24
조치에 대한 출구전략은
햇볕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상호주의와
교류협력의 절충점을
모색하는 합리적
상호주의가 될 것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남북한이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의 노력을 펼치며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고,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고 정상국가의
길로 가야**

- **서:** 이성우 박사님 발표와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남북한이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의 노력을 펼치며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고,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고 정상국가의 길로 가야한다는 데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정책적으로 잘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질문은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준비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의 압력에 의해 아무래도 연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김정은체제가 불안정하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NLL 침범 이외에 다른 형태의 도발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도발의 시기보다 도발의 양상이 궁금합니다.

- **이:** 저는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서 박사님과 반대로 생각합니다. 북한은 정권의 특성상 강성대국이나 주체의 이념 때문에 중국의 요청이 명시적으로 알려질수록 요청을 따를 수 없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북한은 중국을 상대로 해서라도 주체의교를 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이 원치 않는 행위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신호도 보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김정은체제의 도발 가능성의 유형은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탈북자들 사이에 스파이를 보낼 수 있을 만큼 우리 국내 사회가 개방적이고 민주화 된 점을 고려한다면 테러행위는 다양한 수준에서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한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접경 지역에서의 도발도 가능하지만, 앞으로 만약에 북한이 남한사회를 상대로 불만을 터뜨리기 위한 테러라이징이라면, 한국사회의 공개성을 활용하는 테러전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고:** 오늘 유용한 토론이 된 거 같습니다. 많은 의견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기획 및 감수: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고상두 (한국슬라브학회 회장)

편집: 이지영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강지혜 (제주평화연구원 인턴)

저자 약력

■ 흐람치힌 알렉산드르 아나톨리에비치(Храмчихин Александр Анатольевич)

現 러시아 군사정치분석연구소 부소장. 국립 모스크바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러시아 군사평론가로 활동 중임.

■ 이성우

現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2004년 University of North Texa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귀국 후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공공분쟁 사례연구”를 주제로 대한민국 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음. 학술활동으로는 미국국제정치학회가 주관하는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Referee로 활동한 바 있음. 주요 저서로는 『2011 한국인의 평화관: 통일정책과 여론』(2011), 『2010 한국인의 평화관: 외교정책과 여론』(2010) 및 『세계평화지수연구』(공저, 2009) 등이 있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013에 초대합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2001년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역내 다자협력 논의의 장으로 출범, 외교·안보·경제·환경·여성·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매회 그 규모와 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국제종합포럼입니다.

2013년 5월 개최 예정인 제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013

- 주 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중앙일보
- 주 관 제주평화연구원
- 일시 및 장소 2013년 5월 29일(수)~31일(금), 제주도

2012
05.31-06.02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

김황식 총리, 오무르벡 바바노프 키르기스스탄 총리, 폴 존 키팅 전 호주 총리, 람베르토 자니에르 OSCE(유럽안보협력기구) 사무총장, 한승수 전 총리,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창업자 등 36개국 3,100명 참석

2011
05.27-29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글로리아 마파카발 아로요 전 필리핀 대통령, 김황식 총리, 자오지청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주임 등 23개국 1,880명 참석

2009
08.11-13

제5회 제주평화포럼

“상생과 공영의 동아시아 질서: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한승수 총리, 존 하워드 전 호주 총리 등 13개국 650명 참석

2007
06.21-23

제4회 제주평화포럼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 유럽 경험의 탐색”

노무현 대통령, 가이후 도시키 전 일본 총리,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전 러시아 총리 등 13개국 500명 참석

2005
06.09-11

제3회 제주평화포럼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건설: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이해찬 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 첸치첸 전 중국 부총리 등 10개국 500명 참석

2003
10.30-11.01

제2회 제주평화포럼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건설: 도전과 새로운 비전”

노무현 대통령,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전 러시아 총리 등 8개국 450명 참석

2002
04.12-13

세미 제주평화포럼

“21세기 세계 평화의 재검토와 평화의 확산”

2001
06.15-17

제1회 제주평화포럼

“동북아시아 공동평화와 번영”

김대중 대통령,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등 9개국 350명 참석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기획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120

T. +82 (0)64 735 6531 | F. +82 (0)64 738 6539 | E-mail. jejuforum@jpi.or.kr

www.jejuforum.or.kr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